

“정부가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려면 이들에게 상응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95% 이상의 영세한 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하여 제시한 종합지원대책으로 세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정부의 노력은 무척이나 바람직해보였지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업종별로 영세업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업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정책 입안을 하지 못한 것에는 비난이 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초 이 정책의 시발점은 과잉업소를 줄임으로서 업소간의 과당 경쟁을 억제시켜 영세 자영업자들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는 최초 정책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고민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활동 숫자를 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정책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로서, 정부가 앞장서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franchise)화를 유도하면서 프랜차이즈를 하면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정책 입안 실무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자금 지원도 발전 가능성 있는 프랜차이즈 희망 업자와 발전 가능성 있는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로 자금이 지원되면, 5% 미만의 발전가능성 있는 업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95% 이상의 실질적인 영세 자영업자(위치, 자금, 기술, 인적구성, 환경, 교통 등에서 열세한 영업자)들에게는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영세 자영업자는 더욱 영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 정책을 시행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경제사회에서 퇴출시킨다면, 대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정부 또한 실업자 양산화 정부라는 오명과 함께 불안한 사회를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려면 이들에게 상응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95% 이상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5% 미만의 발전 가능성 있는 자영업자에게만 프랜차이즈화

자금지원, 프랜차이즈 업종에 기술인력 개발 및 해외시장개척 등 제조업과 동일한 지원을 보장한다면 자영업자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 또한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추천권을 민간협회인 프랜차이즈협회에 부여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franchisor:본부회사)에게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프랜차이즈화로 유도하는 발상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프랜차이즈의 과대한 영업욕구로 프랜차이지(franchisee:가맹점)의 피해 사항까지도 직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 중의 상당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육성하겠다는 프랜차이즈화 및 대기업과 할인매장 우선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과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들이 점포 운영 방법에서 선택 사항이지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할 사항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창업자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인 정부의 예산을 남용될 소지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하는 정책보다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franchisor)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줘야하는 정책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즉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의 영업범위 설정,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자금살포금지, 대기업끼리만 쉽게 맺을 수 있는 협약수정, 정부가 영세자영업들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광고, 영업기법과 기술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정보수집의 기회부여를 관련 협회를 통하여 제공, 동종업종 간에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가 중소기업 자영업자간의 교류증진 등의 구조적이고 법적인 측면에 접근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공청회 및 다양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사)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 정 일 석